

2012년 5월 24일 공무원 모의고사 사회과목 분석 결과

1. 사회과목 과목별 출제 비중

과목		문항수	비율
법과 정치	정치	3문제 : 4번, 6번, 11번	15%
	법	5문제 : 2번, 3번, 9번, 16번, 18번	25%
경제		6문제: 7, 10, 15, 17, 19, 20	30%
사회문화		6문제: 1, 5, 8, 12, 13, 14	30%

2. 출제 경향

1) 문제 유형

문제유형은 수능형에 가까웠다. 다만, 수능문제에서 출제되는 추론을 위한 도표문제나 자료해석문제는 배제되었다. 개념을 물어보는 사례를 준 뒤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시절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내신문제 유형이라고 분류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다.

정리하자면, 이전 2000년 초반 사회과목이 공무원 필수였을 때와 현재 기능직 전환시험에서의 사회과목에 비해서는 수능형에 가까운 문제들이지만 수능형 문제처럼 고도의 추론을 요하는 문제는 배제되어 양 유형의 절충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2) 난이도

문제 유형이 수능형이긴 하나 추론문제가 배제되었고, 각 교과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개념들(지엽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았음)만 출제되어 난이도는 평이하였으나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이는 사회과목에 대한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에 사회를 공부했었다라는 익숙함만으로 시험을 치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각 과목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한 후에 시험을 치르면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난이도였다고 생각한다.

3. 앞으로 출제 경향

난이도가 쉬웠다고 하나 실제로 4과목의 분량이 적지 않고 그 중 20문제만 출제되어 앞으로 선보일 수 있는 문제출제 포인트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나올 수 있는 많은 개념들이 출제되어 문제가 쌓여가면서 그 난이도도 조금씩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바뀌어 시험과목이 시행되는 처음 몇 해 동안은 과목의 주어진 사례에서 과목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난이도 역시 공무원 시험 시간과 다른 과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유사하거나 조금 어려운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과목별 문제 출제 분석

1) 정치

- ① 4번-이스턴의 정치 모형
- ② 6번-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 ③ 11번-정부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

2) 법

- ① 2번-근대민법과 현대 민법의 원칙
- ② 3번-기본권의 종류(헌법)

- ③ 9번-국제법의 법원
- ④ 16번-헌법개정절차 및 법률 제정 및 개정절차의 이해(헌법의 통치구조편-국회의 입법과정)
- ⑤ 18번-범죄의 성립요건(형법)

3) 경제

- ① 7번-균형가격
- ② 10번-수요의 가격탄력성
- ③ 15번-GNP와 GDP
- ④ 17번-배제성과 경합성으로 본 재화의 종류
- ⑤ 19번-환율
- ⑥ 20번-실업률

4) 사회문화

- ① 1번-문화의 의미(좁은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 ② 5번-사회 이동의 유형
- ③ 8번-복지제도의 종류
- ④ 12번-사회조직
- ⑤ 13번-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 ⑥ 14번-사회현상을 탐구하는 방법

김대근 공무원 사회 해설

[1번 정답] ②

[1번 해설] ① 좁은 의미의 문화란 음악, 미술, 문학 등 교양있는 예술행위, 정신적·문화적으로 발전된 상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ex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상품권, 신문문화면 등). 이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의식주, 가치, 규범, 사고방식 등 생활양식을 의미한다(ex 한국문화, 미국문화, 청소년문화 등)

②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 모두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를 포함한다(물질문화에는 의식주, 도구, 기계, 자동차 등이 있다). 따라서 기계와 같은 문화요소는 (가)의 '문화'에 포함된다.

③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④ (가)의 문화는 평가할 수 있으나, (나)의 문화는 평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2번 정답] ①

[2번 해설]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이다.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내용	변질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적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을 배제한다.	부르주아가 대다수의 가난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변질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 원칙)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는 존중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강제 수단으로 변질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경제적 강자의 책임을 면하는 도구로 변질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

소유권 상대의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계약 공정의 원칙	당사자 간에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한 계약은 무효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3번 정답] ①

[3번 해설] (가)는 청구권적 기본권, (나) 사회적 기본권, (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한다.

- ① (가)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 ②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다)를 의미한다.
- ③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는 (나)이다.
- ④ (나)는 적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고, (다)는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이다.

[4번 정답] ④

[4번 해설] 권위적인 정부에서는 투입단계에서의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가 산출(행정부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5번 정답] ③

[5번 해설] 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계층비교는 세대간 이동을 의미한다.

- ② 부모 세대의 계층을 자녀 세대가 그대로 대물림하는 현상을 세습이라 한다. 부모의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세대 내 이동을 하였다면(ex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경우), 그 사회이동은 세대 간 이동이 될 수 있다.
- ③ 폐쇄적 계층구조를 갖는 사회는 세대 간 이동이나 세대 내 이동에 있어서 수직이동은 엄격히 제한되나 수평이동은 통제하지 않는 계층구조이다.
- ④ 신분제도의 폐지는 구조적 이동으로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모두 초래할 수 있다.

[6번 정답] ②

[6번 해설] A는 정당, B는 시민단체, C는 이익집단을 의미한다.

- ① 정당은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만, 이익집단은 그렇지 않다.
- ② A(정당)는 광범위한 영역에, B는 특수한 영역에 관심을 가진다.
- ③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모두 여론형성기능을 한다.
- ④ 이익집단은 정당의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한다.

[7번 정답] ④

[7번 해설]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두 증가하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게 100개씩 증가하므로 균형거래량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의 변동은 없다.

[8번 정답] ④

[8번 해설] (가) 사회보험, (나) 공공부조, (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편적 복지 이념의 실현은 (가) 사회보험이다.
- ③ (가) 사회보험은 수익자부담, (나) 공공부조는 국가가 부담한다.
- ④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나)의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9번 정답] ②

[9번 해설] ① 조약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③ 한미 FTA는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④ 한미 FTA는 발효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0번 정답] ④

[10번 해설] ① A재는 10% 상승한 만큼 10%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완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변동한 경우에 수요량이 무한정 변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 ②③ B재는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판매수입이 일정하므로 단위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④ 가격이 오른 만큼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11번 정답] ④

[11번 해설] (A)는 의원내각제, (B)는 대통령제를 말한다.

- ① 사법권의 독립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이다.
- ②③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 ④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12번 정답] ②

[12번 해설] 기업은 공식조직, 이익집단이며, 동호회는 비공식조직, 친목단체, 자발적 결사체이다.

- ② 기업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나, 동호회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 ③ 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동호회는 기업과 달리 정의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13번 정답] ②

[13번 해설] 을이 사회를 보는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여 각각의 요소

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가 안정적이며 원만하게 운영되어 사회구조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② 따라서 사회 변동의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③ 외부환경이 변화하여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능론적 관점이다. ④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14번 정답] ①

[14번 해설] 제시된 사회탐구방법은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취한다.

① 사실과 가치가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방법은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②③④는 해석적 연구방법이다.

[15번 정답] ④

[15번 해설] $GDP = GNP - \text{해외수취요소소득} + \text{해외지불요소소득}$ 이다. GDP가 GNP보다 크다는 것은 해외지불요소소득이 해외수취요소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뜻한다.

① 물가상승률은 전년도(2008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2008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② 2010년의 GDP 증가율은 $\frac{110-100}{100} \times 100 = 10\%$, 2011년의 GDP 증가율은 $\frac{120-110}{110} \times 100 = \text{약 } 9.09\%$ 이므로 서로 다르다.

③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해외수취요소소득을 알 수 없다.

④ 외국기업이 갑국에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해외지불요소소득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는 GDP의 증가요인이 된다.

[16번 정답] ③

[16번 해설] ①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②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17번 정답] ②

[17번 해설] A재는 순수 민간재(빵, 사과 등), B는 공유자원(ex 하수정화시설 등), C재는 요금제(ex 케이블티비, 교통, 통신 등), D는 공공재(ex 국방, 치안 등)를 의미한다.

① A재(배제성, 경합성)는 순수 민간재로서 사적 재화이므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② B재(비배제성, 경합성)는 공유자원을 의미하는데,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소비될 가능성이 있다.

③ C재(배제성, 비경합성)는 요금제를 의미하는데,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무임승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임승차는 공공재에서 문제된다.

④ D재(비배제성, 비경합성)는 공공재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18번 정답] ③

[18번 해설] A와 B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A는 긴급피난, B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9번 정답] ②

[19번 해설] 엔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①②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결혼기념 일본 여행을 빨리 다녀오는 편이 낫다.

③④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 결제를 미루고,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빨리 원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20번 정답] ①

[20번 해설] ① 실업률은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2010년 실업률은 $32/80 \times 100 = 40\%$, 2011년 실업률은 $28/70 \times 100 = 40\%$ 으로 서로 같다.

② 고용률은 취업자수/노동가능인구 $\times 100$ 이므로 노동가능인구는 변화가 없는데 취업자는 감소하였으므로 결국 고용률은 감소하였다.

③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인데, 노동가능인구에는 변동이 없고, 위 도표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④ 노동가능인구에 변동이 없을 때, 취업자의 비율이 줄었으므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